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서울 마포구 창전동 6-264 / hrs3388@gmail.com / 02)365-5412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수신: 전북도의회 의장 최진호

발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제목: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제정 촉구 성명

날짜: 2013년 2월 20일(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010-6214-3550)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의 교육·인권·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입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서울, 경기, 광주, 경남, 충북,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또는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별 조례제정운동본부들의 연합체이기도 합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정착 지원 △학생인권 보장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 △“폭력의 교육, 이제 안녕 : 인권친화적 학교와 사회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저희 운동본부는 오는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는 '장영수 의원 발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의회와 민주당 스스로 조롱과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제정될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북도민과 타 지역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교육청 발의안을 마지노선으로 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인 성명서를 참고하십시오. (끝)

전북도의회와 민주통합당은 위험천만한 의회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이달 제정을 앞두고 있다.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의장 직권상정 형식으로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조례 제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다. 얼핏 보면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난 2년여 동안 의회에서 발목 잡혀 온 전북학생인권조례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라리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느니만 못한 참담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장영수 원내대표를 앞세워 교육청 발의안에서 무려 15가지 조항이나 대폭 후퇴한 의회 수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우리는 이 수정안의 기괴한 발상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북에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타 지역에서는 당연하게도 포함되어 있는 조항들이 왜 유독 전북에서만 삭제되어야 하는가. 서울시민의 열망으로 빚어내고 서울시의회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문용린 교육감이 가위질할 명분과 계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인권조례 원안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도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외려 반인권·반민주 세력에게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또 얼마나 무책임한 발상인가.

의회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생자치기구의 정책 참여권,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발언권, 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권, 사적 기록물 검열 금지, 종교과목 대체 과목 수강권 등 타 지역에서는 아예 논란조차 되지 않았던 조항이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보충·자율학습 시간에 교과 진도 금지, 여학생의 바지교복 선택권, 학생의 표현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등도 학생의 선택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임에도 난도질을 당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일이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논란이 있었지만 보편적 인권 보장이라는 원칙과 국제기준,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인권 현실을 고려하여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는 선택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데도 애초 도교육청 조례안에도 포함되었던 학생의 권리 조항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삭제된다면, 사실상 그 권리가 '금지'된 것이라는 해석을 낳을 위험이 크다.

우리는 전북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뜻을 모은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위험천만한 의회 수정안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전북 시민과 학생의 열망을 배반하는 일임과 동시에 다른 지역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많은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이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북의 민주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뜻과 열망을 받들 것인가, 아니면 왜곡·훼손시킬 것인가. 학생인권조례를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타 지역으로부터 우정 어린 격려와 찬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타 지역에까지 학생인권에 대한 부당한 가위질과 뒷걸음질의 명분만 제공할 것인가.

이 어이없는 상황을 돌이킬 시간은 남아있다.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은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은 수준으로 조례안을 다시금 마련하라. 그마저도 어렵다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이 마지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인권·민주 세력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전북도의회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